

식품위생과 사회

탄저병, 광우병, O-157, 고름우유, 분유 발암물질
그리고 방사선조사, 잔류농약 등 세계는 지금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로 혼란을 치르고 있다.
부정 불법식품은 악덕 기업이나 상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살고있는 개개인의 사회적양심 결핍도
불법식품 유행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黃漢俊

〈고려대자연과학대교수/식품생명공학과〉

작금의 세계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로 엄청난 혼란을 치르고 있다. 탄저병, 광우병, 구제역, 병원성 대장균 O-157 (*E. coli* O-157:H7, 이하 O-157) 등 굵직한 사건만 열거해도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3년간, 이들 사건에 의한 파장을 겪었고, 내부적으로도 고름우유, 간장 유해물질(MCPD), 분유 발암물질(DOP, DBP) 소동 등 일련의 사건으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그리고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수입개방으로 지난해

농축산물 수입액이 백억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입대상국가도 전 세계로 확대되어 식품의 다국적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형 병해충, 병원균 등이 유입되어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어 이는 보다 큰 경제적,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우리 사회도 영양과 기호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도의 위생성과 안전성을 갖춘 식품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 농수산물 검역 강화를

지난 9월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병원성 식중독균 O-157 검출사건은 미국 식품안전청(FSIS)이 네브라스카 허드슨푸드사의 쇠고기가 O-157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발표한 후, 국립동물검역소가 국내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던 네브라스카산 쇠고기의 전량검사를 통해 O-157의 검출이 발표되면서 전국을 뒤흔들었다.

본디 대장균은 동물이나 인체에 상주균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으나 일부 특정 병원성 균주들은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 O-157균은 대장 내에서 증식하면서 베로독소(verotoxin)를 생성하여 장출혈을 유발시키고, 심한 경우 용혈성요독 증후군으로 인한 급성신장염을 유발하여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맹독성균이다. 다행히도 유통단계가 아닌 검역단계에서 전량검사를 통해 밝혀져 대형 식중독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이미 유통된 외화 획득용 수입육 때문에 관계당국과 국민들을 긴장시켰지만 별다른 중독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과 성과는 매우 컸다.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검역과 검사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으며, 전문인력, 검역시설 및 장비, 해외정보 수집 등의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또한 검역전문가를 현지파견, 상주케하여 사육단계부터 가공과 선적단계까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으며, 아예 현지에 대한(對韓)수출도축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수입 농축산물만이 문제인가? 국내산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검역단계에서 철저히 색출하여 국내오염을 막고 혹시 이미 이루어졌을 국내오염을 생각해서 외국형 위해균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모든 축산물 취급장에서 철저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실시하여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照射식품 검색해야

수입식품의 위험은 세균이나 해충에 국한되지 않고 잔류농약이나 보존제 또는 중금속 오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사선조사식품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주요대상 품목이다. 여기서 방사선조사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방사선조사는 효과적인 비열처리 저장방법이며, 안전성면에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방사선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상당량의 수입농산물이 조사마크의 표시없이 통관되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검색기술이 국립 농산물검역소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 재조사(再照射)의 우려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입농산물의 상당량은 중국산이며, 현재 중국에는 천 3백여개 이상의 방사선처리장이 있다고 한다. 차제에 조사처리식품은 수출국 현지에서 반드시 포장 표시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현지 상주검역관에 의한 사전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속히 검색기술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상당수는 제조위생 결함, 부정식품, 불법유통, 유통기간 불법변경 등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김밥, 도시락, 햄버거, 자장면 등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 결함은 단골 불청

객이다. 냉장보존해야 할 식품의 상온 보존, 무허가제조 육수 사용, 변질된 식품 판매, 임의로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양심적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결함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콩나물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위반사례의 대표적인 예이다. 농약 사용자 측은 재배시 물을 뿌려 재배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원료콩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점차 희석돼 시판단계에서는 유해물질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원료콩에 흡수된 농약의 양과 재배과정에서 뿌린 물의 양, 온도, 습도, 재배기간 등에 따라 시판 콩나물의 농약 함유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농약성분 일부가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향후 콩나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재배 및 제조과정에서 잔류 우려가 있는 유독·유해물질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식품의 건전은 사회의 건전에서

농축산물의 밀수문제 또한 심각하다. 세관당국이 적발한 규모가 금년 7월 말까지 5백4억원 상당이며 전체 밀수규모의 42%를 차지했다.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검역을 거치지 않아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위반사례들 중 많은 경우, 무지와 무책임에서 비롯된 경우와 의도적인 비양

심적, 반인륜적 행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식품취급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철저한 조리 위생교육, 조리 보존시설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거나 벌칙조항 강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행되는 국민건강의 파괴행위이며 선진조국 건설에 악의 요소로써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는 남을 기만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데서 그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파렴치범이 되는 것이다. 이를 가벼이 벌하고 쉽게 용서하는 사회 또는 그러한 사회악에 무관심한 사회에서는 이보다 더한 사회악이 파생될 것이란 것 짚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사회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복지국가란 부유한 삶의 사회보다 더 중요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사회규범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반인륜적 도덕범죄가 사라진 1등 국민으로서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계, 교육계, 각종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순수 민간차원의 도덕성 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정·불법식품은 악덕 기업가나 상인의 상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사회적 양심의 결핍도 부정·불법식품이 횡행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식품의 건전성은 사회의 건전성에서 온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⑤7